

#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61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4월 2일

발 의 자 : 추승우, 권영희, 김경우, 문장길, 최기찬, 박기재, 우형찬, 박순규, 강동길, 최 선, 신정호, 김평남, 한기영, 김수규, 임종국, 이동현, 김호평, 고병국, 이병도, 이정인, 홍성룡, 김화숙, 이영실, 김혜련, 황규복, 양민규, 이호대, 이경선, 성흠제, 문영민 의원 (30명)

## 1. 주 문

-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간 사업대상지 승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, 불필요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”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건의함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도시미관개선, 재해 대비 등의 사유로 지중설비로 변경하는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”을 지난 9년간 74개사업, 1,859억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추진하고 있음

-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”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부터 검토, 사업승인 및 통보가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 간 접수 및 통보로 이루어져,

서울시는 그간 많은 예산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시급지역에 대한 우선투자는 고사하고 어느 곳이 선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

- 따라서,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“전기사업법”,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이 송 처

- 가. 국 회 : 산업통상자원위원회
- 나. 정 부 : 산업통상자원부
- 다. 기 관 : 한국전력공사

#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

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도시미관 개선, 재해대비 등의 이유로 지중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”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.

본 사업 예산은 “전기사업법”과 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사업예산의 50%를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고, 나머지 50%를 서울시와 해당자치구에서 각각 25% 씩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.

하지만, 이러한 예산분담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사업은 “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”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명기되어 신청접수부터 검토, 사업승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를 제외하고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간 접수 및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다.

그 결과,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74개 사업, 72km, 1,859억원의 예산을 시급지역에 대한 우선투자는 고사하고, 어느 곳이 선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또한, 서울시는 예산 수립시까지 지중화 사업대상에 대한 잠정승인 내용을 알지 못해 자치구 사업대상지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, 금년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지 13개 중 7개 구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미승인 되어 서울시 예산 114억원을 비롯한 해당 자치구 예산이 불용될 상황에 놓여있는 등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.

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간 소통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한다.

2019. 3.

**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**